아이사랑플랜의 성과와 시사점

서문희 선임연구위원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아이사랑플래(2009~2012)이라는 정책명으로 추진 되어 왔다. 아이사랑플래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가장 성과가 높은 과제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포함한 비용 지원 확대인 반면에 가장 성과가 낮은 과제는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이다. 그러므로 향후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우선 추진과제가 된다. 또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공공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무상보육 실시와 더불어 단시간 보육, 일시보육, 부모-자녀 이용시설,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와 지원의 강화가 주요 정책 과제가 됨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나 선택권 보장도 부모 참여 확대와 더불어 주요한 보육정책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1. 들어가기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라는 정책명으로 추진되어 왔다. 아이사랑플랜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 하에서,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신뢰회복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6대 추진과제를 구성하였다. 6대 과제는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어린이집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다.

이 중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와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아이사랑플랜의 실적과 평가

가. 부모 부담 완화

지난 4년 동안 보육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다. 2010년 다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취업 모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전액 지원을 결정

^{*} 본 원고는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과제로 실시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서문희·김혜진, 2012)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임.

하였다. 2009년부터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지원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2012년에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3, 4세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의 유치원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모든 유아에게 적용하며, 지원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담하고 지원단가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2년에 0~2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확대에 힘입어 어린이집 수도 2008년 이후 3년간 6,300여 개 이상 증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같은 기간 동안 21만 명이 늘어났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대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영아 54.1%, 유아 42.0%로 전체 평균 48.0%이다. 보육예산도 국고 약 3조, 지방비 포함 6조 1300여억 원에 이른다.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 예산은 5996억 원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별도로 지원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양육수당이 있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위주의 정책이었다. 보육예산의 98%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2년에는 갑자기 전년도 말에 국회예결위에서 결정된 영아 무상보육으로 보육수요가폭발하여 15만 명의 영아가 어린이집으로 쏟아져나오면서 지방정부의 분담금 부족으로 중앙정부와갈등을 겪고, 결국 지방정부 분담금 3300억 원을중앙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작 취업모등 보육 실수요자는 마땅한 어린이집이 없어서애를 먹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 주로 가정어린이집 인가가 중가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가 대두 되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 아동이 배제된 채 벌어 졌던 일이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영아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나. 수요자 맞춤 지원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취업모, 전업주부 등 부모의 요구에 따른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 도입 외에도 다문화가족 아동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보육 교사 연수 시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도 방법을 교육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 2009년부터 개보수와 장비비를 지원하였다. 2011년에 장애아복지지원법에 의하여장애아 진단·평가·배치 및 보육 지원 체계 마련,장애아 전담, 통합, 일반시설 분류체계의 전환등 보육 지원시스템 마련은 제도적으로는 상당부분 달성되었다.

취업모를 위한 정책으로 2010년에 보육사업 안내에서 입소순위 2순위로 규정된 취업모 자녀를 1순위로 조정하였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였다. 2010년부터는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이외에 보육교사 근무수당 약 30만 원(월)을 지원하여 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부모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부모에게 차등

집 중 조 명

지원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시간연장 어린이집 수는 7.844개소이고 전체 어린이집의 21.0% 정도가 시간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시간 연장 보육 이용 아동 수는 39,313명으로 전체 보육 아동의 약 3.64%이다.

시설 보육 이외에 아동 양육자가 야근·출장· 병원치료, 관혼상제 등 긴급한 상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 하는 사업도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 2007년부터 실시되었는데. 2012년 2월에「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법 체계를 갖추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2011년 에는 7,729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1,280,547 명의 아동에게 951,927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가 87.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에 처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칭) 설립 비용을 지원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놀이공간 제공, 시간제 보육 제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보육비용 지원이 취업모 자녀 등 부모 들의 보육 요구의 차이에 대한 차등 없이 무차별 적으로 지원되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측면은 부족하고, 어린이집 중심의 12시간 보육으로 획일화된 정책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동에게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책 대안으로 이용시간과 유형의 다양화나 부모-자녀 이용시설 확대를 포함하여 수요자 맞춤 서비스의 제공 강화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특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을 활성화 하였다.

보육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평가인증은 지난 5년 동안 많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2010년부터는 평가인증 제2차 시행주기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평가인증을 위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조정하였다. 무엇 보다 필수항목을 두어서 법적 기준의 준수를 강조 하였다. 2012년 4월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 이집은 전체의 80%이며 유지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64%이다. 평가인증 결과는 부분적으로 지원과 연계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 기준 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을 활성화하고 특별활동 관리 지침을 재정하였다. 2010년에는 2007년에 고시된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평가인증 지표 중 보육과정 관련 세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표준보육과정 활용에 대한 상담, 교사 및 원장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2011년 5세 누리과정의 도입을 반영하여 2012년 2월에 0~4세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개정안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2011년 3월 14일자로 보건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광범 위하게 운영되어 오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으로 영유아의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권 보장, 오전 일과 시간 동안에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금지, 24개월 미만의 영아 특별활동 운영 금지를 제시하여 과도한 특별활동이 적정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아동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 관련 각종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프로 그램과의 연계 및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열악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설설치나 안전 면에서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들이 많다. 어린이집 진입 기준을 높여서 건물을 자가 시설로 한정하고 '보육 시설=건물+대지'로 개념을 전환한다는 계획과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식당 교사실, 수유실, 세탁실, 상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을 필수 지원 시설로의 규정은 추진하지 못하였다. 평가인증 제도의 인증유지율은 63% 정도에 머문다. 현재 의 점수결과와 교재교구비 등과의 재정연계가 미약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의 연계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고.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라. 어린이집 균형 배치

어린이집 균형 배치 사업으로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

에는 91개소. 2010년 117개소. 2011년 45개소가 추가되었다. 한편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추진 하였다. 2009년에는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9 개소, 이동식 놀이버스 1개소, 부모협동놀이방 1 개소, 2010년에는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14개소, 이동식 놀이버스 6개소, 부모협동놀이방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24개소, 이동식 놀이버스 10개소, 부모 협동놀이방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 하고 세율도 7%에서 10%로 확대하였으며, 설치비 융자 규모를 2010년에 7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시설전환비 지원금도 늘렸다. 2011년에는 산업 단지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 기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제도적 으로 보장하였고.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위탁 계약 및 보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보강하였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의무 이행여부 집중 관리도 강화하여 2011년 12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2012년 7월 지침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를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여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하였다. 2010년 12 월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사업장은 833 개소이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장, 인근 어린이집

집 중 조 명

위탁 및 보육수당 지급 등 의무 이행 사업장은 578개소로 의무이행률은 69.4%이다. 이 중 민간 기업은 59.1%이다.

2011년 하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공공인프라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10월 현재 총 678개2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는 미미하다. 확대 계획 자체를 축소 조정하여, 현재 연간 10개 미만 수준의 신규 확충 예산이 배정되었다. 보육 재정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공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질적 수준, 지원 수준,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신하기 어렵다.

마. 교사 전문성 및 처우 개선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조치로 2011년에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였다. 이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영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 신규 어린이집장 40시간 직무교육을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필수 직무 교육 80시간으로 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현 보육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을 위한 보육 업무경력 1년을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대학 보육 교사 자격 이수 현 12과목 35학점을 17과목 51 학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을 보육교사, 특수교사,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제한하였다. 2010년에 보육실습 지도지침을 보급하고 보육 정보센터장 및 전문교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사 1급 및 원장 등 실습지도교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제한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은 대체교사와 교사 수당 제도이다. 2009년에 대체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교사가 연가 사용 및 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원 시 보육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보육 교사가 주 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보육정보 센터에서 월급제로 채용된 대체교사를 시설에 파견한다. 대체교사는 2012년에 526명 수준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는 2009년부터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11년에 보육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5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2년에 10만원으로 증가되었다. 이외에 누리

^{2) 1}차는 2011년 6월~7월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받았고, 7월 선정기관 발표, 2차는 8월에 신청을 받아 8월에 발표하고 일부지자체는 10월에 발표 함. 3차는 경기도와 인천지역만이 포함됨.

과정 담당 교사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근무라는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대체교사는 총 526명 규모로 17만명의 교사에 대처할 수 없다. 연가 이외에도 교육, 혼련,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보육인력 관리를 통합보육정보시스템과 연계시킨다는 목표도 향후 보다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추진 과제가 될 것이다.

3. 아이사랑플랜 성과에 대한 보육관계자 의견

아이사랑플랜의 6대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공무원, 학계, 현정전문가 등 보육관계자 조사를 보면, 부모 비용 부담 완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다. 7점 만점에 5점 이상이다. 응답자 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다(표 1 참조).

《표 2》는 보육관계자들이 성과가 높다고 평가한 11대 세부과제인데, 비용부담 완화 영역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안전공제회, 보육통합시스템, 연구기능, 지원기구 등과 같은 하드웨어의 강화, 영양·건강·안전 관리 및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환경기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과제가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는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점수가 높다(표 3 참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세부과제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보육교사 임금 현실화, 대체교사제도 도입이 가장 점수가 높은 등 15개 세부과제 중 6개가 보육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과제이다. 이외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영양·건강·안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지도·감독, 부모에 정보 제공 세부과제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다(표 4 참조).

〈표 1〉아이사랑플랜 6대 추진과제의 성과 정도: 7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비용 부담 완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질 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수)
전체	5.12	3.93	4.46	3.84	4.21	4.21	(107)
(표준편차)	(1.23)	(1.13)	(1.08)	(1.25) (1.07)		(1.17)	(107)
공무원	5.09	4.11	4,21°	3,89	4.34	4.13	(47)
학계	5.23	3,68	4,45	3,50	4.09	4.14	(22)
현장전문가	5.11	3.87	4.76 ^b	3.97	4.11	3.95	(38
$X^2(df)/F$	0.104	1,169	2,849#	1,071	0,662	0.298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임.

^{*} p ⟨ .1.

집 중 조 명

〈표 2〉아이사랑플랜 세부과제 성과 우선순위: 7점 척도

단위: 점

순위	구분	평균	순위	구분	평균
1	다문화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5,08	7	영아보육지원 확대를 통한 영아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4.75
2	어린이집 영양·안전·건강관리 강화	5,05	8	보육정책 연구기능의 강화	4.65
3	어린이집 영양·안전·건강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강화	5,01	9	보육사업 지원지구의 효율적 개편	4 <u>.</u> 64
4	안정공제회 설립을 통한 어린이집 사고예방과 보상기능 수행	4,93	10	어린이집 환경기준 재정비를 통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	4.52
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정보의 적절한 제공	4.91	11	어린이집 평가인증 부담 완화를 통한 평가인증 활성화	4.50
6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4.77			

주: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임.

(표 3) 아이사랑플랜 6대 추진과제의 향후 추진 필요성

단위: 점(명)

구분	비용 부담 완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질 제고 및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수)
전체	3,23	3.36	3.64	3.70	3.42	3.49	(107)
(표준편차)	(0.54)	(0.54)	(0.50)	(0.54)	(0.53)	(0.51)	(107)
공무원	3,23	3,21ª	3,43ª	3,51ª	3,26ª	3,36ª	(47)
학계	3,18	3.45	3.86 ^{bc}	3.77	3.45	3,64 ^b	(22)
현장전문가	3,26	3.50⁵	3.79°	3,89⁵	3,61⁵	3,55	(38)
$X^2(df)/F$	0.177	3,532*	10.475***	7.272**	4.305*	2,468*	_

주: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결과임. ***p < .001, **p < .05, *p < .01, #p < .1.

〈표 4〉아이사랑플랜 세부과제 지속 추진 필요 우선순위: 4점 척도 평균

단위: %(명)

순위	구분	평균	순위	구분	평균
1	보육교사 임금현실화	3.74	9	보육교직원 양성 · 보수교육과정 평가체계 마련	3,54
2	대체교사 인력지원	3,68		초과근무수당 지원비 지급	3,53
3	어린이집 영양·안전·건강관리 강화	3,62	10	중장기적 자격체계 정비방안 연구 수행의 적절성	3,53
4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3,60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3,53
5	영양·안전·건강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강화	3,57	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52
6	열악한 근무환경의 교사에게 특별수당 지급	3 <u>.</u> 56	1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정보 의 적절한 제공	3,51
7	어린이집 지도개선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감소	3 <u>.</u> 55	15	세계적인 프로그램 평가방안 마련을 통한	3,50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내실화	3,55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주: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책에 관한 보육관계자 의견조사」 결과임.

4. 정책 시사점

앞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이사랑 플랜 추진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이 향후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급여나 근로기준법 준수와 같은 전반적인 근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 교육 체계의 정비, 인적·물적 근무환경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된다. 둘째, 보육예산이 확대되면 될수록 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공 어린이 집의 지속적 확충은 중요한 과제이다. 시장 중심의 공급 구조 속에서 무상보육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보육료와 유아교육비가 아동과 부모의 보육서비스 요구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동일하게 지원됨에 따라 영아가 어린이집으로 쏠리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무상보육의 실시와 더불어 단시간 보육, 일시보육 등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부모-자녀 이용시설 확대,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와 지원의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 상승이나 선택권 보장도 부모 참여 확대와 더불어 주요한 보육정책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